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신홍균*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조약의 해석 및 적용
 - 1. 영토 취득의 금지
 - 2. 사적 소유 금지론
- III.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
 - 1. 우주자원의 개념
 - 2.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
- IV. 미국 우주자원법의 국제 조약상 의의
 - 1. 조약의 자기집행성론
 - 2. 우주조약 위반 쟁점
- V. 결 론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Mail : sojs@khu.ac.kr

I. 서론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미국과 구 소련은 수 년간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국내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이 행사되어 2008년도에 공개되었던 기록에 의하면, 구 소련은 우주공간에서 사인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모호한 표현을 채택하는데 두 열강이 합의했다고 한다.

우주조약 제1조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색과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그와 같이 모호한 표현 채택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자국의 영토 보전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주권이 인정된 국가들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주공간을 탐색하라는 규정은 그 내용만으로서도 이미 규범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우주조약 제2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면서,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하다고 보인다. 예컨대, 국가 이외의 기업이나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주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린 부분이 위와 같은 기업의 소유금지여부이다. 지구상 궤도를 넘어서서, 다른 천체 행성으로의 개발 사업에 착수하려면,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 금지 여부라는 불확정성은 투자에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 이후 40여년 동안, 다양한 학설과 해석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불확정성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들의 관행과 학설들은 동 조항에 따라 우주 공간을 소유하는 주권 행사는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에 미국 의회는 우주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하 “우주자원법”이라고 칭함).¹⁾ 동 법률에 따르면 천체행성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미국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되돌아보면 40여년간에 걸쳐서 우주공간에서의 기

1) 51 U.S. Code Subtitle V - Programs Targeting Commercial Opportunities Chapter 513 - Space Resourc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tilization (§§ 51301 to 51303)

업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온 끝에, 결국 소유권은 미국 법령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국내법에 의한 우주자원의 소유권 인정의 국제법상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1967년 우주조약의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학설과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 국가의 국내 법령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우주조약의 특별한 내용과 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위, 특히 법률상 중요 개념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서, 미국 우주자원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법적 지위 등을 우주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의 규율 체계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V. 결 론

우주조약 제6조에 따라서, 미국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인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그러한 우주활동에 따른 국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⁴¹⁾ 그러나 민간 기업이 천체행성 현장에서 천연자원을 이동(remove)시키는 행위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는다.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달 표면에 착륙하여 운석을 주워서 가져온 것처럼, 땅을 파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돌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동’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것인 만큼, 그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법안의 정당성 논리였다. 우주자원법은 미국민이 그런 식으로 우주자원을 점유(possess)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영유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 미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안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천연자원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획득(Obtain)에 이르는 경우는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우주자원의 획득은 미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면서 획득된 우주자원에 대해서 권리가 부여된다는 규정이 우주자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우주자원을 “혹시 발견하면 갖는다”(finder-keeper)에 불

41)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년,6 121면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12, 183면

과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미국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 성재호, “미국헌법 제6조2항의 해석과 관행”,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외국문헌]

- Cestmir Cepelka, Jamie H.C. Gilmour, *The Application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Outer Space*, 36 J. Air L. & Com (1970).
- Bin Cheng,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Clunet) 3, 664 (1968).
- Richard Epstein,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Custom and Law as Sources of Property Rights in News*, 78 Va. L. Rev. 85, 88 (1992).
- Joanne Irene Gabrynowicz,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Regime in the Globalization Era*, AD ASTRA, Fall 2005, at 30, (available at <http://www.space-settlement-institute.org/Articles/IntlSpaceTreatyGabryno.pdf>).
- Stephen Gorove, *Interpreting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37 Fordham L. Rev. 349, 351 (1969).
- Henry R. Hertzfeld & Frans G. von der Dunk, *Bringing Space Law into the Commercial World: Property Rights Without Sovereignty*, 6 CHI. J. INT'L L. 81, 81 (2005).
- Randall Lesaffer, *Argument from Roman Law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 Occupa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1 (2005).
- Marco Marcoff, *Traite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Fribourg, 1973).

Glenn Reynolds & Dave Kopel, *The New Frontier: Preparing the Law for Settling on Mars*, Nat'L Rev. Online, June 4, 2002.

Alexander William Salter, *Ordering the Cosmos: Private Law and Celestial Property Right*, 82 J. Air L. & Com. 311, (Spring, 2017).

Alan Wasser, *Space Settlements,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A Lunar Settlement Claim The Lunar Real Estate It Need*, 73 J. Air L. & Com (2008).

[기타 문헌]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U.S. Senate. 90th Congress, 1st Session,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eir Effect upon U.S. Law”, Stephen P. Mulligan, Legislative Attorney, September 19, 2018

초 록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 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우주자원, 우주조약 제1조, 우주조약 제2조, 우주민간기업, 천체행성